

민주 당권 주자 '宋·金·李' 3색 표심 잡기

송영길·김진표 '이재명 탈당' 공방...이해찬 무대응 정책행보 지역구 방문·경제 간담회·지방 순회하며 초반 기선잡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간 표심 잡기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 쟁점으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자 탈당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격화하는 모습이다.

송영길(56)·김진표(71)·이해찬(66) 의원 등 3명의 후보(기호순)는 지난 31일 전당대회 초반 기선잡기를 위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송영길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공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반면, 이해찬 의원은 '대세론'을 굳혀간다는 정책행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김 의원이 조폭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지사를 향해 '탈당 압박성' 발언을 한 점을 거론, "선거운용으로 활용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이해찬 후보의 핵심(측근)이었던 이화영 전 의원이 지금 경기부지사로서가 있어서 이를 공격하기 위한 발미로 (이 지사 문제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이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선배고 더 뒷사람 아니었느냐, 대통령께서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며 이 의원을 겨냥한 데 이어 "생물체는 어떤 조직이든 때가 되면 죽는 세포는 물러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야 신체나 조직이 건강한 것 아니겠느냐"며 세

대교체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를 둘러싼 문제가 상식과 원칙적인 측면에서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탈당, 지명했던 다른 의원과 비교해 보면 이 지사는 관대하게 보호했다"며 "(이 지사) 취임 후 문제가 확산하고 새 의혹까지 제기되니까 선당후사의 자세로 이 지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공학적으론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타 후보의 공세와 이 지사를 둘러싼 논란에 무대응 전략을 취하는 모양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타 후보의 공격에 대해 "이 의원이 앞서가는 것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며 "저희 길을 뚜벅뚜벅 가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듣고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진행 상황도 점검하고 있다"며 "권리당원 등 유권자들이 현장 정책 행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예비경선 때보다 분위기가 더 좋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후보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표발을 다지는 데도 여념이 없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중랑구 망우리 묘지 공원을 찾아 죽산 조분암 선생 59주기 추모식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서울 강서병·강서갑·서초을 지역대의원대회를 찾았다. '유능한 경제 당대표론'을 들고나온 김 의원은 중구 을지로에 있는 SK오피스클라보 센터를 찾아 경제정책 간담회를 했다. 이 의원은 전날 광주 현장 방문에 이어 이날은 전북 익산을 찾아 정책 테마 일정(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을 소화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盧 탄핵때도 계엄문건 작성" 주장 민주 "대통령 감정한 기무사 존재 이유 없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노무현 정부 탄핵정국에서도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기무사 군 대정복 상황센터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며 "한국당 원내대표실 명의로, 제 명의로 공식 요청한 자료나 기무사는 당시 문건을 즉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6년 계엄 문건뿐 아니라 2004년 문건도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줘야 한다"며 "2004년 문건이 합법적인 대응이었다면 2016년 문건을 내란으로 치부해 적폐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정부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는 데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시중에 도는 다양한 내용과 관련 정보가 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때 군에서 작성한 위기상황 문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도청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서는 "군개혁을 국방부가 하는지 시민단체가 하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군조차 정권에 길들이려한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무사령부는 이날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기무사는 위기관리 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계엄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했다.

민주당 백해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 사랑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화까지 감청한 기무사는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기무사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개된 내용이 내부고발과 제보에 의한 것이라는 하나 국방부장관과 대통령 통화내용이 언급되고, 개인정보 열람의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는 등 매우 구체적이기에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민생 위해 힘 모읍시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31일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선미, 바른미래당 유의동,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김태연, 바른미래당 채이배, 자유한국당 윤재욱 의원. /연합뉴스

여야, 부자증세 충돌

한국당 "편가르기"... 민주 "과세 형평 기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초과 세수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초과 세수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과 함께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의 경우 야당도 지난 대선 때 약속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 "편 가르기",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을 내놓은 데 대해 전향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는 입장이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와 과세형평에 기여한 세법 개정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두드러진다"며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이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로 원활하게 확정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규제 혁신 처리 공감...소상공인보호법은 입장차

여야 민생경제법안 TF, 우선처리 40건 제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법안 TF가 지난 31일 총 40건 이상의 우선 순위 법안을 제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23건, 한국당 15건, 바른미래당 10건의 '우선순위 법안'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의보다는 각 당의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한 의견만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연 민주

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각 당이 처리하고 싶은 민생관련 법안,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그 법들을 한 번씩 검토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각종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여당은 당정정이 중점 법안으로 삼은 일명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

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을 가져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제시했다.

여당은 규제혁신 5법이 규제프리존법의 골격을 가져와 독소조항 등을 손 본 수정안이라며 교차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당 등 야권에서 주장해 왔던 서비즈니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대해서도 상임위 간사간 협의제를 꾸려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입장을 보인 알려졌다.

어린이집 차량 안전을 위한 '슬리퍼차일드체크'법과 폭염 대책, 불법촬영물(몰래카메라) 방지 등을 포함한 '미투법'에도 여야 모두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여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으로 내세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재산권 침해 등으로 입장 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이밖에도 소상공인 대책인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여성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바른미래당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9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 청문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1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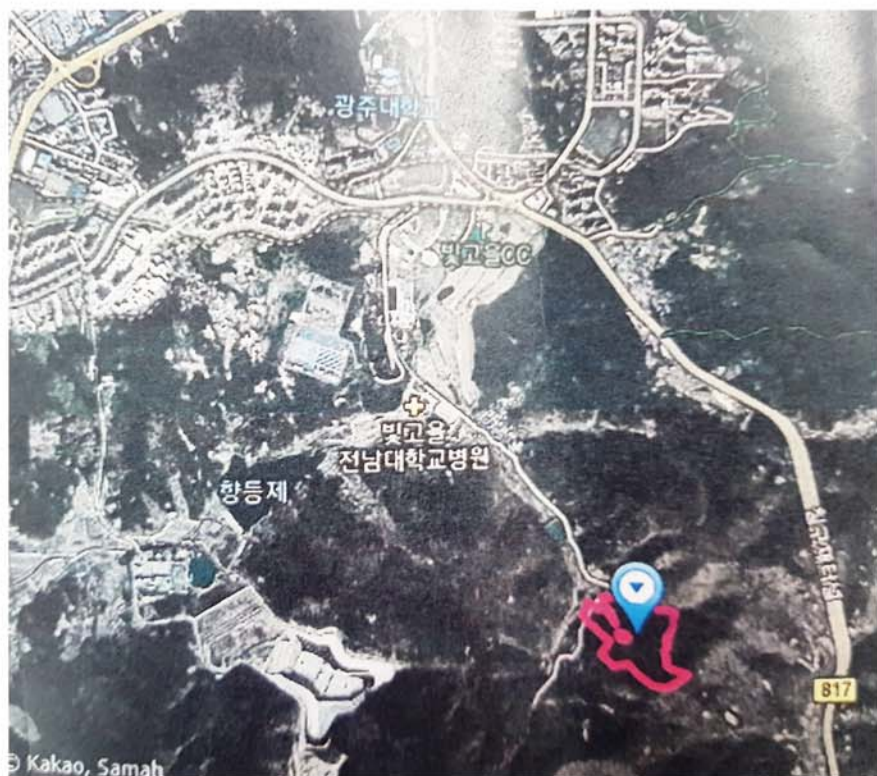
이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는 9일 이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쌓은데다 여야 의원들과의 사이도 원만해 무난하게 적격 의견의 인

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경우, 장관 후보자로서는 신상과 관련 별다른 논란이 없는데다 주변의 평판이 좋아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후보자가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